
그동안의 규제개혁 실적

2017. 1. 25

국무조정실

||| 목 차 |||

I . 서론	1
① 규제개혁 필요성	1
② 규제개혁 목표	1
II . 그동안의 규제개혁 실적	2
① 규제개혁 추진체계	3
② 국민·기업 참여형 현장중심 규제개혁	4
③ 규제개혁 시스템 혁신 및 국민체감도 제고	5
III . 규제개혁 주요사례	6
IV . 향후 규제개혁 방향	10

I. 서론

1 규제개혁 필요성

-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및 국내 경기상황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거시경제 정책, 4대 부문 구조개혁, 규제개혁 등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정부의 경제 전략 필요
 -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: ICT 융합, 4차 산업혁명 도래, 중국 경기 둔화, 미국 금리인상, 브렉시트 등 경제 불확실성 증대
 - 한국의 현재 상황 : 양적 성장 한계 직면, 경제성장을 점진적 하락, 저출산·고령화, 높은 가계부채 등 구조적 문제 심화
- ⇒ 규제개혁을 통해 단기적인 경기대응과 장기적인 경제체질 강화를 도모

2 규제개혁 목표

규제개혁 목표

고비용·저효율 경제체질 개선

모호하고 복잡한 규제,
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효과

- ➔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,
자유롭고 공정한 경제활동 보장

민간의 자율과 창의 극대화

사전적·획일적 규제 효과,
비규제적 수단 우선 고려

- ➔ 다양성 및 창의성 발휘,
자율적 시장조정 기능 확충



경제활성화 및
일자리 창출

II. 그 동안의 규제개혁 실적

기초

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
국민 생명·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보완·강화(Two-track 방식)

추진 체계

주요 내용

규제개혁 장관회의

- 규제개혁 정책 및 주요현안 논의
- * 대통령(의장) · 총리(부의장) · 주요부처 장관 등 구성
→ '14.3월 이후 5차례 개최, 7시간 끝장토론, 입지 · 물류 · 인증 · 신산업 · 외투 · 조달 등 파급력 큰 분야 집중 개선

규제개혁 현장점검 회의

- 지역 순회, 현장 규제애로 집중 혁파
- * 총리주재, '15.7월 이후 8차례 개최(격월 개최)
→ 공장 신증설 및 산단활성화, 규제개혁 형태 개선, 지역규제 건의 신속해결 등

규제개혁 위원회

- 신설 · 강화 규제심사, 불합리한 규제 개선
- * 위원장 2인(총리, 민간위원장), 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 20~25인

국민과 기업 참여형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

<규제신문고>

- '답변-소명-개선권고' 3심제 도입, 수용률 40% 도달

<손톱밀가시>

- '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' 신설('13.9월), 100여회 현장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과제 발굴

<규제기요탄>

- 대한상의 · 중기중앙회 · 소상공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함께 기업 경영활동 저해규제 발굴, 단기간 집중 개선

규제개혁 시스템 혁신

'규제비용관리제, 규제개혁특별법 발의, 규제개혁 7대 원칙 제시 등

혁신체감도 제고

규제정보포털 운영
주기적인 이행상황 점검·평가

1

규제개혁 추진체계

① (규제개혁 장관회의) 대통령 주재, 규제개혁 정책 및 주요 현안을 논의

* “규제개혁은 돈을 안들이고 투자·소비를 활성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”, “규제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 읽는다, 무역투자진흥회의, 국무회의 등을 통해 지속 점검

○ (실적) '14.3월~'16.5월까지 총 5회* 개최('16.12.28,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는 제외)

* '14.3.20(1차), '14.9.3(2차), '15.5.6(3차), '15.11.6(4차), '16.5.18(5차)

- 규제 관련 주요 정책 및 현안 등 29건 보고

* 규제시스템 개혁방안, 외국인투자 규제혁신,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, 융합 신산업 창출 및 자율주행 등 신산업 관련 규제개선, 인증규제 혁신 등

- 현장 규제애로 92개 건의 받아 89개 개선(국회 심의 중 6개 포함) 완료

② (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) 총리주재, 지역 현장,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

○ (실적) '15.7월~'16.10월까지 총 8회 지역 순회 개최

구 분	1차	2차	3차	4차	5차	6차	7차	8차
·개최일	'15.7.30	'15.10.20	'15.12.3	'16.2.23	'16.4.27	'16.6.22	'16.8.31	'16.10.20
·개최지	경기 안산	광주	부산	대전	대구	원주	인천	경기 화성

- 규제 관련 주요 정책 안건 및 현안 추진상황 15건 보고

*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, 중복규제 제도개선, 인허가·신고제 합리화, 40년만의 보세공장 규제혁신, 해양레저 산업 경쟁력 강화 등

- 지역의 현장 규제애로 78개를 건의 받아 66개 개선 추진(수용률 84.6%)

③ (규제개혁위원회) 대통령 직속기구,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·조정하고 신설·강화규제에 대한 심사, 경제분과위원회와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둠

* 위원장 2인(총리, 민간위원장), 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 20~25인

○ (실적) '13~'16년까지 총 219회 개최, 안건 783건 처리

* 본위원회: 87회, 454건 처리, 경제분과: 61회, 140건 처리, 행정사회분과: 71회, 189건 처리

2

국민·기업 참여형 현장중심 규제개혁

- ① **(규제신문고)** '14년 3월 개설, '답변-소명-개선권고' 3심제 도입, 수용률 40% 수준 도달, 국민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대표 플랫폼

* SBS 방송 「좋은 정부의 조건」에서 국민신뢰가 높은 정책으로 소개('15.11월)

- (실적) 개설 후 3여년 만에 9,691개 건의 받아 3,850개* 해결(39.7% 수용)

* 257개는 총리실 소명조치(249개) 및 규제개혁위 개선권고(8개)를 통해 해결

- 해결과제 70% 이상이 국민생활·자영업자 규제개선 사항

< 수용건의 대상별 분류 >

대상별	계	국 민	자영업자	기 업	기타(국방 등)
개 수	3,850	1,737	993	1,017	103
비중(%)	100	45.1	25.8	26.4	2.7

- ② **(손톱 밑 가시)** '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' 신설('13.9월), 100여회 현장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기업 규제애로 등을 발굴하여 개선

- (실적) 총 5,120개를 발굴, 1,886개(수용률 36.8%, 수용 972개 기시행 914개 포함)을 개선키로 하고, 수용과제 972개중 859개 개선 완료(완료율 88.4%)

<개선 추진 현황>

구 분	총 계	개선 완료	국회심의 등 진행 중	개선 완료율(%)
2013년	397	395	2	99.5
2014년	196	187	9	95.4
2015년	198	177	21	89.4
2016년	181	100	81	55.2

* 기시행 과제 914개(13년 272, 14년 177, 15년 293, 16년 172)는 제외

- ③ **(규제기요틴)** 대한상의·중기중앙회·소상공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 단체와 함께 기업경영활동 저해 규제를 발굴하여 단기간 집중 개선

- (실적) '14.12월 이후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3차에 걸쳐 310개의 개선과제 확정, 283개 개선 완료(완료율 91.3%)

<개선 추진 현황>

구 분	총 계	개선 완료	국회 심의 등 진행 중	개선 완료율(%)
1차('14. 12월)	114	103	11	90.4
2차('15. 7월)	123	119	4	96.7
3차('15.12월)	73	61	12	83.6

◇ (7대 원칙) 확고한 원칙아래 강도 높은 규제개혁 추진, 행태개선에 기여

규제개혁 7대 원칙(총리, '15.10월)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① 규제신설 원칙적 억제 | ② 규제비용 부담 경감 |
| ③ 원칙허용·예외금지 규제방식(네거티브 규제방식) | |
| ④ 기존규제 체계적 정비·관리 | ⑤ 불합리한 지방규제 신속 정비 |
| ⑥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| ⑦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|

① **(규제비용관리제)** 규제 신설·강화로 유발되는 사업활동 비용을 분석하고 이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토록 하여 규제 부담 경감(27개 부처 전면실시, '16.7월~)

○ '16년 115건의 규제비용관리제 적용을 통해 440억 원의 연간균등 순비용* 절감('16.12.19, 규제사무 기준)

* 매년 발생하는 직접비용에서 직접편익을 차감한 후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연간 순비용

** 농림부 △ 870억원, 국토부 △ 520억원, 고용부 △ 240억원 등

② **(시스템 혁신 제도화)** 19대 국회 임기 종료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자동 폐기('15.8월 발의), **규제개혁특별법 제정으로 재발의**('16.5월)

* 규제비용총량제, 네거티브규제방식, 규제탄력적용 등 법적 근거 마련

○ 법 개정 전 정부내 조치 가능한 부분에 대해 총리 훈령으로 추진('16.7월)

③ **(행태개선 등)** 공직자 행태 변화를 위해 인허가 간주제 및 신고제 합리화('16.6월), 규제개혁 7대원칙 제시('15.10월), 전국규제지도 공포*('14.12월) 등

*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 촉진, 경제활동 친화지역 상위등급 지자체 수 대폭 증가(S,A 등급: '14.12월 68개 → '15.12월 110개 → '16.12월 135개로 증가)

④ **(규제정보포털)** 규제정보의 단일 창구로 전면 개편('14.9월, 2차 규장),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주요 과제 이행상황 대국민 실시간 공개

⑤ **(점검홍보)** 주기적인 점검, 국민체감 우수사례 선정, 현장체감 경제효과 분석, 웹툰 및 카드 뉴스 등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을 통한 홍보

Ⅲ. 규제개혁 주요 사례

1 신산업 규제혁신

- 민간주도 신산업투자위원회 구성('16.3월), '원칙개선·예외소명·네가티브 방식', 국제적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규제 재설계
 - * 5개분과(무인이동체, ICT융합, 바이오헬스, 에너지·신소재, 신서비스, 민간 전문가 80명으로 구성('16.12월)
- 5대 유망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'16년도 총 271개 과제 발굴 중 255개 개선(수용률 94%)
 - ('16년 상반기) 드론·자율주행차·3D프린팅 의료기 등과 관련된 규제를 집중 개선하여 규제 최소성 확보(151개 중 141개 개선)
 - *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보고('16.5.18.)

주요 개선 사례

구분	과제명
무인이동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국민안전·국가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 드론 활용 신규 사업 전면 허용 ● 기업 등 개발자가 원하는 전국 어디서나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가능
ICT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전파 출력기준 상향(10mW~200mW) 등 세계 최초의 IoT 전용 전국망 구축 ●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마련
바이오헬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응급상황에서 3D 프린팅 환자맞춤형 의료기기 허용 ● 세포치료제 2상 임상자료 심사 후 우선 허가(시판 후 3상 조건)
O2O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자필기재 이외 음성녹음 등 다양한 계약방법 허용 ● 공유민박 영업가능 일수 확대, GPS 기반 택시미터기 도입 등

- ('16년 하반기) VR/AR, AI, 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를 확대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 위한 신산업 규제 혁신 지속(120개 발굴)
 - *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 보고 예정

2

선제적 규제정비

- 입지·개발, 부담금, 판로·영업 등 기업 활동 전 분야를 대상으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집중 발굴하여 단기 내 신속처리('16.5월)
- (실적) 경제혁신 걸림돌 규제 303개 일제정비(한시유예 54개 포함)
 - 정부 내 조치 가능한 시행령 이하의 개선 과제 집중 발굴 개선 (시행령 이하 287개, 법 개정 16개)
 - * 총 4조원의 경제효과, 1만 3천여명 일자리 창출 기대(KDI 추정)

주요 개선 사례

-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전 광업권 취득한 경우 보호구역 해제
- 문화·관광시설까지 공유재산 장기대부 허용
- 수도권 산단 조성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, 농지보전부담금 50% 감면(2년)
-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기존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 시 건폐율 40% 증축 허용
- 단순광고 대행업체가 옥외광고업 등록 시 사무실 의무 확보 면제(2년)

3

인증규제 혁신

- 민관합동 인증혁신 TF*를 구성하여 203개 법정인증(의무 73개, 임의 130개) 전수조사·정비('15.11월)
 - * 국무조정실, 중소기업청, 국가기술표준원, 중소기업음부즈만, 중소기업중앙회 등
 - ** 중기 평균 인증수 10개, 기업당 연간 인증비용 3,000여만원(중기중앙회, '15년)
- (실적) '국제기준과 일치화, 유사·중복인증 전면폐지, 중소기업 비용 부담 경감'의 개선원칙에 따라 113개 개선(통·폐합 36개, 비용·절차 개선 77개)
 - * 23만 중소기업이 연간 약 5,400억원 비용절감, 약 8,600억원 매출 증대 기대(KDI추정)

주요 개선 사례

- 불박이 가구에 대해 국제기준보다 과도한 규정(대형챔버시험)을 국제수준(소형챔버 등)으로 개선
- 축산물 HACCP 및 식품 인증을 HACCP 인증으로 통합 일원화
- 환경성 평가항목이 유사한 '탄소성적표지'를 폐지하고 '환경성적표지'로 통합
- 전기용품 안전인증 정기검사 주기 확대(1년→2년)
- 환경표지사용료 폐지, 화장지 길이에 관계없이 단일 인증

4

조달규제 혁신

- 국가계약법 제정('95년) 후 21년 만에 최초로 조달계약 전수조사 및 32만 조달기업 건의 분석, 국가-지방-공공조달법령 비교·개선('16.12월)
- (실적) 입찰·진입, 평가·낙찰 관련 등 총 139개의 제도·행태개선
 - * 연간 3.1조원의 경제효과, 1만 7천여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(조달연구원 추정)

주요 개선 사례

- 물품·용역조달 입찰시 2.1억원 미만은 '실적에 의한 참여제한' 폐지
- 2.1억원 미만의 물품공급 입찰 시 '최저가 입찰제도' 폐지
- 지체상금율(연 36.5%) 1/2로 축소(일별 1,000분의 0.5로 경감)
- 사업 완료 경과 후 최대 21일 경과 시 자동 '검사·검수한 것으로 간주'
- 불필요한 자체 서류(예: 계약대금 신청시 제출 서류) 제출 폐지 및 반복 서류 나라장터 저장·관리시스템 구축

5

지방규제 혁신

- 불합리한 지방규제 6,440개 정비('15년)와 지역 현장에 맞지 않은 중앙규제 개선('16년) 등
- (지방규제 정비) 규제개혁 최초로 11개 분야 지방 규제를 전수 조사하여 상위법령 불일치, 법령 미근거 등 6,440개* 집중 정비(Top-down, '15.10월)
 - * 상위법령 불일치 4,252개, 법령 미근거 1,244개, 위임사항 소극적용 845개, 기타 99개
- (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선) 투자저해 및 주민생활 밀착형 규제중심의 지역현장에 맞지 않은 중앙규제 318개 선정, 150개 개선(Bottom-up)
 - * 경제분야 180개 중 87개 개선('16.10월), 사회분야 138개 중 63개 개선('16.12월)

주요 개선 사례

- (서울) 공공업무시설 2~5층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허용
- (전북) 청소년수련원의 일반인 개별숙박 허용
- (경남)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시 폐기물보관시설 기준 완화(10일분→1일분)
- (경북) 도서지역 수목원 등록 기준 완화(1천종 이상→해당지역 자생종 75%이상)
- (경기·충북) 농촌진흥구역 내 곤충체험시설 허용

6

보세공장규제 혁신

- 40년 만에 대대적인 보세공장제도 규제혁신, 민관합동 규제 TF 운영*, 현장의 목소리(현장 릴레이 토크(Talk!))를 최대한 반영·개선('16.8월)

* 관세청, 지역 세관, 보세공장 입주기업 및 관련협회로 구성

- (실적) 104개의 건의를 받아 76개 개선(74개 정부 내 조치로 신속 추진)

* 연간 1조 666억원 경제 지원 효과(매출 증가 9,266억원, 물류비용 절감 1,330억원, 행정비용 절감 70억원), 고용창출 2,690명 기대

주요 개선 사례

- 수출물품 제조·가공 및 유사 공정에 필수 투입물품은 제조공정에서 소모되지 않더라도 보세공장 원재료로 인정
- 보세공장 외 일시 보관 허가기간 연장(최대 2년→3년)
- 보세공장 외 일시 보관장소로 물품 이동시 보세운송기간 폐지
- 수입 원재료의 보세공장 도착 전 사용신고 및 국산 원재료의 보세공장 반입 신고에 대한 자동수리제 도입
- 2회 이상의 외주작업 시 1건의 작업허가로 가능하게 하고, 허가기간을 연장(1년→2년)

7

인허가·신고제 규제 혁신

- 인허가, 신고제도는 전체 민원사무의 약 40% 해당, 행정청이 인허가·지연의 피해를 부담하는 국민중심의 규제혁신, 공무원 행태 개선 기대

- (실적) 201개중 인허가 101개* 및 신고제 100개** 합리화 방안마련

* 인허가 간주제 62개, 인허가 투명화 11개, 협의 간주제 28개

** 약 1,300개의 신고규정 중 영업 및 사업신고 같은 경제활동과 관련된 100개 우선 정비

인허가관련 주요 개선 사례

- 인허가 간주제 : 옥외광고물 및 산지전용허가·신고(변경포함), 민영도매시장 허가, 도축업·집유업·축산물가공업 등 영업허가
- 인허가 투명화 : 의연금품 모집허가,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
- 협의 간주제 : 건축법상 건축허가, 마리나항만사업 실시계획 승인
- 신고제 합리화 : 의료기기 수리업, 의료기기 판매업·임대업신고 먹는 샘물 등의 유통전문판매업 등 신고

IV. 향후 규제개혁 방향

- ◇ “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정부는 결코 마침표를 찍을 수 없다”
- ◇ “규제개혁은 민생이다” *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('16.12월)

- (민생지원 규제환경 조성) 중기·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 및 서민층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서민생활 친화적 규제 환경 조성
 - 민관합동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체 등을 통한 현장 애로 신속 해결
- (미래대비 규제설계) 신산업투자위원회 중심으로, 인공지능·가상현실 등 빠르게 재편되는 글로벌 산업지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
- (경제활력 제고) 행정조사 등 각종 부담 경감,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등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지속 추진
- (시스템 혁신) 규제비용관리제 안정적 정착, 규제 메뉴얼 개정, 맞춤형 규제개혁 교육 프로그램 등 규제개혁 시스템 완결
- (체감도 제고) 그간 개선과제에 대한 실적 점검 및 현장조사 실시, 현장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등 대국민 소통강화



- (1차) '14.11월 8개 경제단체에서 총 153개의 규제기요틴 과제를 접수 받아 정부가 검토하고, 그 결과를 민관이 함께 논의하여 **114개를 개선** 추진

* 대한상의, 전경련, 중기증, 경총, 무역협회, 벤처협회, 중견련, 소상공인연합회

주요개선 사례

- 전자금융업 진출 시 필요한 자본금 기준 완화
- 노후된 거점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시행가능면적 확대(10%→30%)
- 건설현장 내 덤프트럭,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한 석유이동판매 허용
- 대규모의 단일판매·공급계약 공시관련 진행사항 정기(1년) 공시의무 폐지
- 벤처기업의 정부 R&D 참여 시 부채비율관련 요건을 완화

- (2차) 7개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(경총 제외) 등을 통해 건의 받은 기업 현장규제 176개를 집중 검토하여 **123개를 개선** 추진('15.7월)

주요개선 사례

- 산단에 연접한 공업용지의 건폐율을 80%까지 허용
- 가구제품 다수공급자 계약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세부 규격수 축소
- 날개 없는 선풍기는 에너지효율등급 적용 품목에서 제외
- 계획관리지역내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기준 합리화
- 온라인 보험계약 체결 시 e-메일, SMS, OPT 등 고객의사 확인방식 확대

- (3차) 대한상공회의소 등 5개 경제단체와 릴레이 간담회 등에서 90개의 과제를 접수받아 **73개를 개선** 추진('15.12월)

* 시행초기인 화평법 및 화관법관련 건의를 포함한 환경분야가 전체 건의의 절반 수준(40개)을 차지하였으며, 환경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 35개 개선

주요개선 사례

- 기 설치된 6미터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실내저장시설은 높이 기준(6미터) 면제
-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점의 경우 관리자 선임의무 완화 (안전교육 이수자도 가능)
- 공장설립완료로부터 5년 경과한 경우 산업용지 분할 처분 허용
-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경우 농어촌공사 보유수면 점용료 50% 감면
- 화재·폭발 등 대비, 안전장치 설치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불연재료 사용 면제